國葬정국 여야 일단은 화해무드

9월 국회·10월 재보선 등 굵직한 현안 산적

여 '조건없는 등원' … 야 '원내외 병행 투쟁'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여야의 극한 대치국면이 지속되면서 혼란을 거듭했던 정국은 새로운 국면이 형성될 전망이다.

일단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정치권에 '화해와 통합'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정국은 '대립과 분열'보다는 '대화와 화합'을 모색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했던 '3김 시대'가 종식됨에 따라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올해만 두번째 '서거정국'을 맞은 정치권은 정국 타개책 모색을 위한 직간접 대화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당장 9월 정기국회 개원과 이에 따른 국정감사, 예산 심의는 물론 10월 재보궐 선거 등 굵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강행 처리 이후 냉각된 여야 관계를 해빙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철저한 의회주의자였던 DJ의 유지를 내세워 '조건없는 등원론'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제의할 전망이다.

반면,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의 부당성을 홍보하며 장외투쟁을 벌여왔던 민주당은 DJ의 서거에 따른 화해와 용서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원내외 병행투쟁' 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야당으로서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도 민주당의 9월 정기국회 등원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DJ 서거 정국 이후 치러지는 10월 재보선에서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투영될지도 향후 정국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권은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미뤄져 왔던 개각 등 인적쇄신과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한 후속 작업을 통한 국정 드라이브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은 민심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한국 정치의 폐단인 지역구도 청산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선거 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은 여야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남북 당국 간의 접촉이 이뤄지는 등 해빙 무드를 맞고 있는 남북 관계의 진전 여부도 관심사다.

또, 진보 및 개혁 진영의 운명도 갈림길에 놓여있다는 관측이다. 생전에 '대통합'을 강조했던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야권 통합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영결식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이 고인의 생전 영상물을 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이규택 친박연대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연합뉴스

DJ-YS 화해 지역주의 깰까

김대중(DJ) 전 대통령 생의 마지막 순간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필생의 라이벌 DJ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극적 화해'가 한국 정치의 영원한 숙제인 지역주의 극복의 촉매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정치사에서 수십년간 고착화된 영호남 지역구도가 이들 지역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온 두 정치 거목의 화해로 서서히 허물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서다.

YS는 DJ의 병세가 악화한 지난 10일 병원을 찾아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얼마 전까지도 DJ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그였지만 "화해했다고 봐도 좋다"며 곡절 많은 애증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었다. 병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DJ도 차남 김홍업 전 의원이 YS의 병문안 소식을 전하자 알아들은 듯 김 전 의원의 손을 꼭 쥐었다고 한다.

YS는 지난 18일 DJ의 서거 소식을 듣고 곧장 빈소로 달려와 "나라의 큰 거목이 쓰러졌다"고 애도했다. 그는 또 지난 20일부터 YS의 상도동 자택 대문에 DJ의 서거를 애도하는 조기를 내걸도록 지시했다. 국장 기간 불필요한 약속을 가급적 뒤로 미루며 먼저 떠나간 오랜 동지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다는 후문이다.

두 사람을 정점으로 한때 야당 정치사를 양분했던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도 지역주의 청산이라는 숙원을 이루기 위해 동서화합의 가교를 자임하고 나섰다.

85년 DJ와 YS를 공동의장으로 해 구성됐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고리로 지금까지 느슨하게나마 연결의 끈을 놓지 않았던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는 국장 기간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광장에서 공동 상주를 자임, 문상객을 맞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 등 집권 2기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DJ와 YS의 화해가 지역주의의 벽과 이념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두 사람의 화해로 물꼬를 튼 화합과 상생 무드가 실질적 통합으로 완결되려면 여야의 정치력 발휘를 통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 해묵은 지역감정의 앙금이 하드웨어 개선만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란 녹록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한 정치컨설턴트는 "DJ-YS의 화해가 지역주의 극복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 "의회민주주의 발전, 남은 숙제"

민 "서민·중산층위해 더 노력하자"

DJ 영결식 정치권 논평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린 23일 여야는 공식 논평을 통해 고인을 추도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야만 하는 마음에 슬픔이 크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인권, 그리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고 평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고인께서 평생 추구했던 의회민주주의 발전은 정치권의 남은 숙제가 됐다"면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길, 남북화해의 길을 열어가는 데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그 책임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아! 이 이별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면서 "대통령께서 떠나신지 6일 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님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확인했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또 "이제 남기신 뜻대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겠다"면서 "더 이상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를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 평화통일을 향해 가는 정당으로 국민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고인이 영면하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서거를 계기로 망국적 지역감정이 해소되고 동서와 남북 화합의 계기가 된다면 그분의 공과가 보다 더 가치있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고인께서 살아생전 독재로 인해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험난한 생의 고비마다 절개를 지키고 결국 6·15공동선언이라는 큰 업적을 남긴 것을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며 "고인이 생전에 온몸으로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통일의 유훈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DJ 없는 호남 정치판도는

민주 텃밭 주장 약화 가능성 지역주의 극복 나서야

'포스트 DJ' 놓고 정세균·박지원의원 등 경쟁할듯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23일 영면에 들면서 호남 정치 구도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호남 정치권의 대주주로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그의 공백은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우선 DJ 유지대로 지역주의 장벽이 서서히 허물어지면서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의 화해 등 통합과 화합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 등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경우 호남 정치권은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의 공백은 민주당에 커다란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호남에서의 텃밭 주장은 이제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물론 하루 아침에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성향을 버리기는 힘들겠지만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이 진정성을 보여주며 공을 들이는 한편 우수한 인재로 호남민에게 다가갈 경우 민주당 일색의 지역 정치구도는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친노(親盧) 신당의 출현은 민주당을 긴장케 하고 있다. 신당이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받들고 지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경우 신당의 파괴력은 상상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기대 이하의 공천을 하고 신당이 유력한 공천 탈락자를 중심으로 바람을 일으킬 경우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호남정치권의 대표 주자를 놓고 정치인들 간에 벌이는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 박지원·김효석 의원, 무소속 정동영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누구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7월 전당대회, 이어 차기 대선후보 경선 때까지 치열한 경쟁을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정치력을 시험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호남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김 전 대통령이 없는 빈 자리는 광주·전남과 민주당, 차기 대선과 민주당 등의 함수관계 속에 지역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가장 근접하게 채워주는 인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